

김제·부안 주민 70% “새만금 해수유통 찬성”

김제시민- 찬성 이유로 '새만금호 살리기'가 가장 높아
반대 이유는 '개발사업 차질 발생'에서 36.8%

부안군민- 찬성 이유로 '명품수변 도시 건설'서 34.8%
반대 이유는 '수질문제 해결 가능'에서 32.3%

'새만금 해수유통'이 전북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중심 도시인 김제시·부안군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해수유통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중희 의원(김제·부안, 사진)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김제시(2월14~16일) 만18세 이상 시민 1000명, 부안군(2월14~17일) 만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김제시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7%, '반대한다'는 응답이 11.8%로 나타났다. 해수유통 찬성이 반대보다 6.2배 높았다. '어느 쪽도 아님' 응답은 15.5%였다. 남성(76.3%)이 여성(69.1%)보다 7.2%p 높게 나타나 해수유통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행자위, 전주·군산지역 공유재산 대상지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전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전주·군산 지역의 대상지를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전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전주·군산 지역의 대상지를 찾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도 정기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립국악원 철거 및 증·개축' 등 4건으로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운동부지도자 처우·교육재정 안정화 향상

교육위, 의안 3개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9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3개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미 타시도 8곳에서 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선형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기금운용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산경위, 추경 심사 실시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우규)는 10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 제2차 회의를 갖고 전북도 농축수산식품부에 대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 조례로 외부 이전문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와 동시에 교육환경 개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주시 기본소득 추경 편성 환영”

민주 김성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카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며 총 250억원이 편성됐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과 관련해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부 추경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전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에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10일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경제위기기구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호 법안은 전주특례시”

전북 비투 강원 등 광역시 없는 도에 한곳 이상 지정

민주 김운덕 예비후보, “1호 공약은 아중호수 관광단지”

"김운덕표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운덕 후보는 "전주 특례시 법안은 복잡한 계산식을 떠나 전북을 비롯한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 특례시를 한 곳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인들 음성 판정 때 해외 입국 허용되도록”

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산 해외입국 제한 해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우리 기업인들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기업인의 해외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정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09개국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과반인 56%가 한국인 입국을 부분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일반 관광객이 아닌 기업인의 경우 이처럼 해외 입국이 막힐 경우 당장 수출입 등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건강확인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이렇게 함으로써) 긴급 출국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 허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감염병 전쟁 승리 정확한 정보 전달 중요”

민주, 문 대통령 내외 겨냥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숙 여사를 겨냥한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감염병과 전쟁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당국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악질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법적 남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김경숙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를 동문으로 엮어 특혜설을 제기하고, 김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가짜뉴스도 풀었다"고 열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윈손으로 하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 이만희 신원지 총회장과 악수한 사진, 이만희 신원지 총회장과 악수한 사진"이라며 "이런 허위사실도 유포됐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조순총을 위해 긴급행정부령을 내릴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언론사의 기사인 것처럼 꾸며서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9일부터 코로나19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염병 전쟁 승리를 위해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도 전날 문재인 부대변인이 기자회견과 만나 김경숙 여사가 공식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의 조순혜 대표와 동문이라는 소문 등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민생 살리기”... 이용호 의원, 총선 공약 제1호 발표

'일 잘하는 사람, 이용호'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본격 선거활동에 돌입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정공약 제1호로 '민생 살리기' 편을 발표했다.



민생과 골목경제가 살고, 국가 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국가 경제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가업 제38호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를 위해 28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선거위에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거소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확진자나 격리자를 공직선